

15명 탄 어선 기관고장 비금도 해상 표류

목포해경 어둠·풍랑 속 침착 구조

513함, 7시간 만에 서망항 안전 이송

목포해경이 풍랑 속에서 15명이 탄 채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어선을 무사히 애인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21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신안군 비금도 서쪽 4.6km 해상에서 흑산도로 향해 중이던 29t급 체낚기 어선 태양호가 지난 20일 오후 3시55분께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진도군 서망항에서 15명의 선원을 태우고 조업에 나간 지 불과 3시간 만이었다. 태양호 선장 김모(60·부산시)씨는 이 같은 사설을 선주에게 알렸다. 당시 바다는 3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치고, 초속 15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다.

선주는 곧장 선단선인 6t급 어선을 유



타고 태양호에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좀처럼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더욱이 표류중인 태양호에 성급하게 접근했다가 충돌 등 차치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선단선은 태양호에 다가가지도 못한 채 1시간 30분 만인 오후 5시30분께 회항했다. 이후 태양호로부터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 513함(함장 박정민 경감)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바다에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있어 더 시간이 지체될 경우 상황은 급박해질 수밖에 없었다.

513함은 우선 방송을 통해 태양호

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어 안전거리를 유

했다. 예인용 로프는 정확하게 태양호로 날아갔다.

태양호 선원들은 해경의 지시에 따라 513함에서 보낸 예인용 로프를 태양호에 묶었다. 513함은 혹시 모를 충돌 사고에 대비해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이후 513함은 로프에 묶인 태양호를 예인해 진도군 서망항을 향해 이동했다. 안전을 위해 2~3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던 513함은 약 7시간만인 같은 날 밤 11시30분에 서망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12월 26일에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해상을 통과하다 침몰 중이던 화물선에서 승객과 선원 15명 전원을 신속하게 구조한 데 이어 이번에도 맹활약해 서남해의 든든한 파수꾼으로 자리잡았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고구석기자 yousou@

지하며 조심스럽게 태양호 주변에 접근했다. 오후 6시30분께, 어느새 바다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으나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은 여전해 예인 작업이 쉽지 않았다. 513함은 탐조등을 켜 주변을 확실히 비추고 본격적인 예인을 준비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513함이 예인용

로프를 매단 투색총을 태양호에 발사

“양과동 폐기장 감사결과 조속 발표를”

민노당 광주 남구위원회

들은 축소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주민을 무시하고 법을 어겨가며 진행된 사업으로 박탈된 이상 (관계자)처벌을 요구한다”며 “해당업체 또한 불법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09년 8월~11월 사이 양과동 개발제한구역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 총 3가지 종류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잇따라 내렸다. 이날 현재 해당 시설들은 각각 80~90% 가량 지어진 상태다.

이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광주시는 지난 7월 특별감사에 착수, 최근 국토부로부터 ‘건축허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져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이날 현재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내일침 (8400)

그렇지도
여려운데...
500억 들여
연수원 짓는
계획이니!

국민들 시선이
고지 안 된 템데...
그래서
잘보려고...

눈썹 미신
보통스성경에
정신 많다 삼소

대공용의자 누명 이상석씨
항소심 3억 배상 승소 판결

광주지법 민사7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 이상석(48)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환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이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안사 소속 군인 등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강제연행해 고문·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4년 내무실에서 동료에게 복합을 찬양·고무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지인들에게 해병대 훈련 방식 등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년이 경과 풀려났다.

이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재심 전에 이뤄진 민사(손해배상)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복구 편입 반가워요’

21일 광주시 북구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열린 ‘편입 주민 한가족데이’ 행사에서 북구로 편입되는 동구 산수1·2동 주민 200명이 헬당·헬입검사 및 금연상담 등 의료상담서비스를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격·세·지·감

한총련 의장 출신 강위원 복지관장

자신 법정 세운 검찰 시민위원 위원

한총련 의장 출신 사회복지운동
가가 자신을 법정에 세운 검찰의
자신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격세지
감을 실감케 하고 있다.

2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강
위원(40) 광주 광산구 운남권 노
인복지관장은 최근 광주지검의 제
3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18명 가
운데 1명으로 위촉됐다. 강 관장은
앞으로 6개월간 시민위원회에 회
부된 사건 피의자의 공소제기 여
부, 양형,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
청구 등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강 관장은 1997년 5기 한총련 의
장으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
반으로 구속돼 4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강 관장은 경찰에서
체포돼 송치된 뒤 기소와 재판과
정에서 수십번 검찰청사를 드나들
었을 뿐 아니라 검찰의 불법이감
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까지 벌
여 승소하기도 했다.

강 관장은 시민위원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위촉식에 참석하느
라 광주지검 청사에 들어가면서도

포승줄에 묶여 들어가던 생각이
났다”며 “나는 법적으로 연루된
적도 있으니 시민위원회에 회부되
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 빠를 것”이
라고 말했다. 검찰은 더욱 폭넓은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시민을 찾은
끝에 강 관장 외에 한국노총 지역
본부의 간부도 위촉했다.

광주지검 강찬우 차장검사는
“시민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법률 전문가를 배제하고 일반 시
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검찰
에 비판적인 그룹도 좋다는 생각
으로 사람을 찾다가 해당자들을
추천받았다”고 말했다. 강 관장은
출소 후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해
2008년 고향 영광에서 복지공동체
‘여민동락(與民同樂)’을 꾸렸으며
올해 초에는 7급 공무원 신분인 노
인복지관장에 재용돼 눈길을 끌었
다./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불법 오락실 여전히 판쳐

올 상반기 1200건 적발... 서울·경기 이어 세번째

신학용 의원 국감 자료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오락실이 여전히 활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불법 오락실 단속 건
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서는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찰청이 21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
에게 제출한 ‘2008~2011년 상반기
불법오락실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경찰에 단속된 전국의 불법
오락실은 2008년 3만5626건, 2009년

4만1790건, 2010년 3만2286건, 2011
년 상반기 1만803건 등으로 3년6개월
간 12만50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2250건)·경기(1428건)·광주(1149
건)·부산(864건)·경남(814건) 등으
로 순으로 많이 단속됐으며 전남은
423건으로 도 단위에서는 경남(814
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신학용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질
수록 불법 오락실, 사설 경마장같이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행성 산업이 번
성하기 마련”이라며 “서민경제에 피
해가 가는 이 같은 시설을 철저히 단
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174건, 2010년 486건, 2011
년 1~8월 368건 등으로 3년8개월간
220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3년8개월
간 경기(823건), 서울(493건), 부산
(436건)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6건,
전남 12건, 전북은 23건에 불과했다.

신학용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질
수록 불법 오락실, 사설 경마장같이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행성 산업이 번
성하기 마련”이라며 “서민경제에 피
해가 가는 이 같은 시설을 철저히 단
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1174건, 2010년 486건, 2011
년 1~8월 368건 등으로 3년8개월간
220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3년8개월
간 경기(823건), 서울(493건), 부산
(436건)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6건,
전남 12건, 전북은 23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2250건)·경기(1428건)·광주(1149
건)·부산(864건)·경남(814건) 등으
로 순으로 많이 단속됐으며 전남은
423건으로 도 단위에서는 경남(814
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신학용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질
수록 불법 오락실, 사설 경마장같이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행성 산업이 번
성하기 마련”이라며 “서민경제에 피
해가 가는 이 같은 시설을 철저히 단
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174건, 2010년 486건, 2011
년 1~8월 368건 등으로 3년8개월간
220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3년8개월
간 경기(823건), 서울(493건), 부산
(436건)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6건,
전남 12건, 전북은 23건에 불과했다.

2009년 1174건, 2010년 486건, 2011
년 1~8월 368건 등으로 3년8개월간
220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3년8개월
간 경기(823건), 서울(493건), 부산
(436건)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6건,
전남 12건, 전북은 23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2250건)·경기(1428건)·광주(1149
건)·부산(864건)·경남(814건) 등으
로 순으로 많이 단속됐으며 전남은
423건으로 도 단위에서는 경남(814
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신학용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질
수록 불법 오락실, 사설 경마장같이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행성 산업이 번
성하기 마련”이라며 “서민경제에 피
해가 가는 이 같은 시설을 철저히 단
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174건, 2010년 486건, 2011
년 1~8월 368건 등으로 3년8개월간
220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3년8개월
간 경기(823건), 서울(493건), 부산
(436건)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6건,
전남 12건, 전북은 23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2250건)·경기(1428건)·광주(1149
건)·부산(864건)·경남(814건) 등으
로 순으로 많이 단속됐으며 전남은
423건으로 도 단위에서는 경남(814
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신학용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질
수록 불법 오락실, 사설 경마장같이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행성 산업이 번
성하기 마련”이라며 “서민경제에 피
해가 가는 이 같은 시설을 철저히 단
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174건, 2010년 486건, 2011
년 1~8월 368건 등으로 3년8개월간
220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3년8개월
간 경기(823건), 서울(493건), 부산
(436건)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6건,
전남 12건, 전북은 23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2250건)·경기(1428건)·광주(1149
건)·부산(864건)·경남(814건) 등으
로 순으로 많이 단속됐으며 전남은
423건으로 도 단위에서는 경남(814
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신학용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질
수록 불법 오락실, 사설 경마장같이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행성 산업이 번
성하기 마련”이라며 “서민경제에 피
해가 가는 이 같은 시설을 철저히 단
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174건, 2010년 486건, 2011
년 1~8월 368건 등으로 3년8개월간
220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3년8개월
간 경기(823건), 서울(493건), 부산
(436건)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6건,
전남 12건, 전북은 23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2250건)·경기(1428건)·광주(1149
건)·부산(864건)·경남(814건) 등으
로 순으로 많이 단속됐으며 전남은
423건으로 도 단위에서는 경남(814
건)에 이